우암학원 창학 76주년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光州日報
74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682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월 3일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시·도 통합 기대·우려 교차…"민생 어려움 해결해달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전한 설 민심

광주는 도시 정체성 실종 걱정
전남은 대도시에 흡수 우려 커
"지방선거 이재명 마케팅 그만"

광주·전남 지역민은 설 연휴 기간동안 '시·도 통합에 따른 기대와 불안' '민생의 어려움' 등을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을 찾은 지역민은 시·도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고 광주지역은 '도시 정체성 실종'을 걱정했으며, 전남지역은 '대도시 흡수'에 대한 우려가 컸다.

특히 통합 과정에 지역민의 목소리를 지역 정치권이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지방선거 유불리만 따지면서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에 몰두한다는 불만도 컸다.

18일 지역 국회의원들은 모처럼 가족이 함께한 광주·전남 명절 밥상에 "시·도통합 이야기와 민생경제 문제가 단골 메뉴로 올랐다"고 전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입장 차이도 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은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고, 불안감도 있었지만 전남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면서 "통합에 따라 '광주시에 모든 것이 휩쓸려 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가장 컸고, 이에 청사를 전남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고 전했다.

양부남(광주서구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점을 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다"면서 "통합 이후 광주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컸다"고 소개했다.

정진욱(동남갑) 의원은 "수출이 역대 최대이고 코스피가 최고치를 찍어도 민생경제 골목경제는 바닥이었다"면서 "전남광주 통합이 이 문제를 푸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기대가 컸다"고 명절 민심을 소개했다.

광주지역의 익명을 요구한 한 국회의원은 "통합 과정에 국제도시로서 위상이 확립된 '광주'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된다"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경기 침체를 호소하면서 '명절 특수도 없었다'는 전언도 나왔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읍·면 소재지마다 삭막함은 평일과 큰 차이가 없을 만큼 한산했다. 농어업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민생회복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이 주를 이뤘다"면서 "농어민들께서는 아직 통합 논의를 피부로 실감하지 못했고, 주소재지는 반드시 무안 현 전남도청이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 이번 설은 귀성객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한다. 코스피 5500를 돌파했지만 서민들의 윗목은 아직도 온기가 없다"며 "지역구 대학생 부모 20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했는데 '청년일자리가 보장되면 고향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에서 미래를 보았지만 진도 대파가 팔리지 않아 농부들이 울상이었다"고 말했다.

시·도 통합에 따른 지방선거 조기 과열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 내 관심도가 조기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지역민은 지방선거 리더의 자질로 '정부와의 강력한 국정 철학 연대 및 실용적 지역 발전 역량'을 손꼽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남지역 일부 국회의원은 "지방선거 첫 통합 단체장에 도전하는 일부 정치인이 지역발전보다는 자신의 선거를 위해 잇따라 말을 바꾸거나 정치적 역할을 아예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역민의 질타도 있었다"면서 "과도한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해 관련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방선거 분위기를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다시 일터로…아쉬운 귀경길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광주송정역 승강장에 귀경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윤석열 내란 재판 오늘 선고…국민이 지켜본다

'12·3 불법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관련기사 6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상계엄 선포 43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방송사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다.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형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광주통합법, 재정지원 특례 대폭 후퇴

국회 행안위 문턱 넘어
'보통교부세 25% 가산' 삭제
입법과정 보완 이뤄져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나 핵심인 정부의 재정 보장안이 대폭 후퇴해 보강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2면〉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총 413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 지방정부를 구성할 단초를 마련했다.

하지만, 강력한 정부의 재정 지원 특례가 모조리 빠져 껍데기만 남은 선언적 법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의 영구적이고 구체적인 보장 장치가 법안에 온전히 담기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초 법률안에는 통합 후 10년 동안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기준재정수요액에 일정한 비율을 가산한다는 구체적인 산식이 명시돼 기획재정부의 재량권 개입을 차단했다.

이 조항의 핵심인 재정 지원 산식은 행안위 심사에서 통째로 사라졌다.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문구만 남겨둔 채 실제 얼마나 지원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삭제된 것이다.

매년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 같은 구체적 장치도 없다. 결과적으로 지원 규모가 중앙정부 예산 편성에 좌우될 공산이 커졌으며 훗날 정부 논리에 따라 지원금이 축소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심사 과정에서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와 사채 발행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관련 특례도 수용하지 않았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내세우는 현 국정 기조와 달리 중앙 부처가 산하기관 기득권을 쥐고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구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사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후속 전담 조직을 통해 누락된 재정 원칙과 국비 지원 방안을 신속히 챙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정훈 국회행안위원장은 "통합특별시의 국비 지원과 재정 원칙이 명확히 담기지 않았고, 자치구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 법안이 충분히 다듬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 후속 대응 TF를 조속히 구성해 누락된 사안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노트북·PC 가격 급등 새학기 학부모 속탄다 ▶6면
페퍼스 승승장구, 최다승 기록 갈아치웠다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경북 울진 '오감 여행'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